전남광주시 조직개편 후유증…핵심 공석·인력 혼선

행정소방위원회 행감

팀장급 약 73% 교체…전문성 저하 우려

부서별 정원 현황자료 제각각…관리 부실

市 위원회 482개 중 213개 회의 실적 '0'

시의회 "인력운영 개선·위원회 정비"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 과정에서 핵심 보직 공석과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전문성 저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각종 위원회 역시 전체의 44%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과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9일 자치분권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 이후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자치분권국의 핵심 부서인 균형발전인구정책과장과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종합민원실장이 공석"이라며 "담당 과장이 없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요구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7일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감 직전에 팀장급의 73%가 교체됐다"며 "한꺼번에 인력을 교체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부서별 공무원 정원 현황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데 대해 "자치분권국 자료에는 본청 정원이 2천818명으로 기재돼 있지만 인사기획관 자료에는 2천935명으로 나와 있다"며 "조직과 정원을 총괄하는 부서의 자료가 서로 다르면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한 의원(민주당·비례)은 "조직개편 이후 일부 직렬과 임기제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균형과 기존 광주·전남 공무원들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완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력이 더 필요한 곳이나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시의 위원회가 총 482개에 위원 수만 7천912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213개로, 동일·유사 위원회 중 근거 법규 정비가 필요한 곳도 77개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운영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며 "위원회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숙희 의원(민주당·북구1)도 "설치된 위원회의 44%가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조례에는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회의를 허용하고 있는데 서면회의가 관행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다"며 "조례 규정대로 운영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한 위원회는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국장은 "안건이 없어 회의를 열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고, 폐지할 경우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다"면서도 "이번 행정통합을 계기로 실효성이 없거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변은진 기자



"전입·신규 임용 축하합니다"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9일 무안청사 정약용실에서 전입 및 신규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70억 들인 광주천 수질개선시설 4년째 '먹통' 방치

AI반도체환경위원회 행감

가동에 100억 추가 필요…책임 규명 요구

악취방지시설 효과·측정 방식 변경도 도마

광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7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이 준공 후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면서 예산 투자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술 검토가 잘못됐다는 광주환경공단의 설명까지 나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의 광주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022년 8월 준공된 광주천 혼합응집시설이 지금까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광주천 혼합응집시설은 수질 개선을 위해 약 70억원을 들여 설치됐지만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준공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다. 현재까지 광주환경공단에 정식 인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날 감사에서 "당초 기술 검토가 잘못된 사업"이라며 "현재 기술로는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가동하려면 별도의 침전조 설치가 필요해 약 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70억원을 투입한 시설의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며 "기술 검토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책임 소재와 함께 추가 예산 투입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악취 관리시설의 실효성도 감사대에 올랐다.

오미섭 의원(민주당·서구2)은 제1하수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에 약 45억7천만원을 투입했지만 복합악취 측정값이 지난해 4분기 208에서 올해 2·3분기 448로 두 배 이상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법적 허용기준인 500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석주 의원(민주당·여수6)은 광역위생매립장 무인 악취 측정·자동포집기의 표시 방식을 최댓값에서 30분 이동평균값으로 바꾼 경위를 따져 물었다. 순간적인 악취 발생이 평균값에 묻힐 수 있어 실제 주민 체감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귀순 AI반도체환경위원장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미해결 과제와 향후 개선 방안을 차기 경영진에게 충실히 인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환경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되면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명진 기자

"정부 지원위, 호남 반도체 심사 전문기구 아냐"

전남광주시 "여러 분야 전문가가 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대해 반도체 전문 심사기구는 아니라고 밝혔다.

배미경 대변인은 이날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위원회는 전남광주시의 발전과 행정, 재정 지원을 폭넓게 심의한다"며 "개별 반도체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직접 심사하는 전문기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31일 지원위원회는 2027년도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5조원 지원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며 "당시 개별 반도체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원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카페 대표로 지칭된 위원은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지역에서 브랜드를 창업해 서울, 인천까지 진출시킨 청년위원"이라며 "의사로 지칭된 위원은 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총장"이라고 반박했다.

호남 반도체 용수 부족 지적에도 "반도체 팹 4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0만3천t으로 정부와 전남광주시는 예비 물량을 포함해 하루 106만t의 수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는 지원위원회에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등 비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사업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변은진 기자

민형배 시장,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 동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민 시장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럴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서도록 금융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전남광주시도 긴급자금 지원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필요한 도움이 제때 닿도록 시민 가까이에서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